

# 대입 '권역별 고사장' 사라지나... "공정성 문제·비용 부담"

대학가 "미운영 무계... 활용도 낮아"  
교육부 "운영 여부, 이달 내 확정"  
'자가격리자 권역 이동 지침' 마련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치러진 지난 10월 서울 한 대학 입구에서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나오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올해 대학입시의 실기·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위한 권역별 고사장 운영 여부를 두고 교육부와 대학이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대학들이 시험 공정성 문제와 비용 부담을 토로하고 있어 '미운영' 방안이 무계가 쏠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대학별 고사 응시 기회를 위해 전국 8개 권역에 고사장을 마련했지만 비용부담을 느낀 대학들의 고사장 활용도가 낮은데, 지난 2월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가 수험생은 자가격리 상태에도 권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올해 권역별 고사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은 응시 대학에 마련된 공간에서 실기 등 고사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

6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권역별 대학입학관리협의회 등이 최근 비공개 회의

를 통해 올해 입시를 위한 '권역별 고사장' 운영 여부를 놓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서울권 대학 한 관계자는 "각 대학에서는 '권역별 고사장' 운영 및 참여에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고 말했다.

권역별 고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상태에 놓인 수험생이 거주 권역을 벗어나지 않고, 대학별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

된 제도다. 지난해는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 8개 권역에 20개 권역별 고사장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난해 권역별 고사장 활용도는 낮았다.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감염 위험도 따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학입시 관련 관계자는 "같은 대학, 같은 학과 실기임에도 권역별로 각기 다른 평가자가 평가한다는 점과, 실기도구 등 시험 환경차이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이유로 지난해에도 결국 대학들이 권역별 고사장을 대부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사장 이용 비용도 부담이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우 대학마다 고사장 이용 비용이 일일 최소 수십만원에서 최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컸다"며 "권역에서 당일 한 대학만 고사장을 이용할 경우, 그 대학이 고사장 이용 비용을 모두 지불하게 되면서 (타 권역별 고사장을 이용하는 다른 대학과) 10배 이상의 비용을 내는 등 들쭉날쭉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대입을 마친 올해 2월, 중대본이 수험생의 권역별 이동 방안을 담은 지침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3판)을 마련하면서 올해는 대입 수험생의 권역별 이동이 공식적으로도 가능해진 상태다.

중대본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권역 이동 및 시험 응시에 관한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변호사 시험 등 국가시험이나 입시에서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지난 2월 (일정 조건 하에) 수험생의 권역 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며 "다

만, 대학입시와 관련해서는 시험 주최인 대학과 교육부가 별도 가이드 라인과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중대본의 해당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 수험생은 보건당국의 외출 허가를 받은 뒤,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를 받아 모니터링 담당자를 대동해 이동 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동은 자차나 방역택시를 이용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차량 지원도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역별 고사장 운영 여부는 방역 당국, 대학과 협의 중"이라며 "충분한 협의와 내부 검토를 거쳐 확정된 뒤 7월 내 전국 대학에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들이 실기고사에 자가격리 수험생 응시를 보장할지는 미지수다.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 여건을 학내 마련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에도 숙명여대·연세대·인하대·한국외대 등은 권역별 고사장을 이용했지만, 한양대 등은 실기 전형 관련 학과 지원자의 경우 코로나19 자가격리 수험생을 제한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서울시교육청, 거리두기 3단계시 원격수업

학원 종사자 PCR 검사 2회 실시  
학교별 자율적 운영 방안 고려

서울시교육청이 개편된 거리두기 3단계로 상향될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등을 적극 검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조희연 교육감 주재 긴급 실·국 과장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표될 경우 선제적 원격수업 전환 등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서 "소규모학교 등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해 자율적인 운영 허용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등학교 1~2학년, 소규모 학교는 매일 등교하고 있다. 중학교는 지난 14일부터 3분의 2 밀집도를 지켜 격주로 등교하고, 고등학교는 고3 포함 3분의 2 밀집도로 등교가 이뤄지고 있다.

중학교는 기말 고사 이후 전환기 학사 운영 시 현장 체험 학습을 되도록 금지하고 수업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밖 주요 감염사례로 꼽히는 학

원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학원 강사에 대한 선제 PCR 검사도 확대한다. 교육청은 학원 및 교습소 강사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선제 PCR 검사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여름방학 전과 후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방학 전 후 2회 실시되는 선제 PCR 검사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다음달 16일부터 9월 5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학교는 교육지원청과 분청 해당 부서가 공동대응팀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 서울과기대, 2021 ROTC 설치대학 선발

공군 고급장교 인력 양성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5일 국방부 '공군 장교학군단(ROTC)' 설치대학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과기대는 공군 고급장교 인력 양성을 위한 '에어포스 퀀텀 5.0' 계획 중 우주, 사이버·전자기파 및 인프라에 특화된 3개 분야의 강점을 제시해 공군 장교학군단 설치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서울과기대는 육군에 이어 공군 장교학군단을 함께 보유하게 됨으로써 육군과 공군이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통섭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과기대 공군 장교학군단은 올해 11월까지 후보생 선발을 마치고 12월에

창설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과기대의 디스커버리 학기제 내에 '에어스쿨'을 설치해 공군 장교 예비 후보생의 교육을 진행한다.

서울과기대는 전국 122개 학군단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주관 '20년 학군단 설치대학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으며, '2021년 동계 기초군사훈련'에서도 최우수 성적을 기록해 109개 학군단 중 1위를 기록했다.

한편, 2006년 3월에 창설된 서울과기대 육군학군단은 현재까지 586명의 육군장교를 배출했다. /이현진 기자



## 호서대-서울대, 다육식물 암 예방 효능 규명

국내 최초 규명... 특허등록

호서대학교와 서울대학교 공동 연구팀이 가정에서 흔히 키우는 관상용 다육식물 '녹영금'과 '여우꼬리 선인장' 추출물에서 암 예방 및 치료 효능을 국내 최초로 규명하고 특허 등록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호서대 화학생명공학부와 서울대 동물생명공학전공에서 공동 수행한 연구가 올해 들어 '녹영금 추출물을 포함하는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제 102232817호)'과 '여우꼬리 선인장 추출물을 포함하는 암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제 10221713호)' 2건의 특허가 연속으로 등록되는 성과를 냈다.

'녹영금'의 건강기능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례는 국내에 없었다. 이번 연구에서, '녹영금' 추출물은 흑색



녹영금(왼쪽)과 여우꼬리 선인장 /호서대

종 세포에 대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BAX와 CASP9 유전자 발현을 유도했고, 에너지 합성에 필요한 IDH3, SUC LG1, MDH1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했다.

또, 정상 피부세포에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고 흑색종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증식을 억제했다. 이를 통해 2019년 11월 특허 출원됐으며, 지난 3월 등록됐다.

/이현진 기자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 지원 강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신규 과제 선정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가 1963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선정 결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 유형을 비롯해 중견연구자, 일반공동연구, 명저번역, 인문도시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총 894개 과제가 포함됐다. 해당 연구는 이달 1일 개시됐다.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목적·대상·기간 등에 따라 A·B유형으로 구분, A유형은 단절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지원하고 B유형은 1년간 연구를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학과 개편 지원 등 직업계고 취업 돕는다

교육부, 직업계고 취업지원 방안

지방공기업에 고졸채용 목표제가 도입되고 지방직 9급 공무원 직업계고 선발이 확대되는 등 코로나19로 취약해진 직업계고 취업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취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채용상황 악화과 대면 서비스업 침체로 인한 직업계고 졸업자의 일자리 축소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준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

(NCS) 기반 인공지능(AI)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하고 민간 훈련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훈련과정을 제공해 전문적인 기술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또 직업계고 수요조사를 통해 기능사 18개 종목에 대해 추가 검정시험을 실시하고, 직업계고 3학년 등을 대상으로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 지원도 추진한다.

올해 8월까지 고졸 취업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조속히 구축하고 채용·기업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도취업지원센터에 화상면접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엔 졸업자 대상 온라인 취업박람회도 2회 개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